▌ 예산정책연구 제9권 제4호 2020. 12. pp.125-147 https://doi.org/10.35525/nabo.2020.9.4.005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배분 요인에 관한 연구: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함의*

박건우** 윤성일***

국문초록

본 연구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는 여전히 미비하였으며, 무엇보다 실증적인 접근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배분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요인을 통제하고 경제적 요인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 요인 중에서 지역내총생산과 재정자립도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제변수로 설정한 정치적 요인 중에서 지방선거 득표율과 투표율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성향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보수적 성향의 자치단체장이 이러한 보조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배분의 메커니즘 이해를 증진하고, 향후 보조금의 효과적인 배분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함의가 있다.

□ 주제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투고일: 2020. 10. 9. 수정일: 2020. 11. 20. 게재확정일: 2020. 12. 2.

* 본 논문은 2019년 한국지방정부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음을 밝힙니다. 논문의 발전에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1저자: 건국대학교 더좋은규제연구소 초빙연구원 (a9hero@hanmail.net)

*** 교신저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yoon1@krila.re.kr)

Ⅰ. 서 론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려야 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이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이정표이자 의지입니다.[1]*"*

-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 中, 문재인 대통령 발언 -

2020년은 국가균형발전선언의 16주년이 되는 해이다. 역대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 주요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2004년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더욱 가시화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2]"을 도모하였다. 이후 2020년 문재인 정부까지 국가균형발전은 정부의 주요한 정책 어젠다(agenda)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paradigm)은 역대 많은 정부에서 지역의 경제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으나,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기정훈 외 2020; 한정택 2018; 박재곤 외 2007; 김순은 2018).[3]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과 역할을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부의 정책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는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제성장을 촉진함으로서, 지역 간 경제적 격차의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인식된다. 본 제도의 목적은 기업의 투자확대, 지역의 성장역량 강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박상철 · 문문철 2011; 박건우 · 윤성일 2019). 동 제도

---

1) 김태규,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인사말," 「중앙일보」, 2018. 2. 1. 〈https://news.joins.com/article/22338112〉

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균형발전법」, 〈http://www.law.go.kr/〉

3) 기정훈 외(2020)에 따르면 서울, 인천, 그리고 경기도 등의 수도권 지역에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며, 전체 경제의 70%가 집중되어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가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는 실질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를테면, 강원도와 같이 산업 인프라 확충 및 기업의 투자유치가 절실한 지역의 경우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4)]

기업의 투자는 생산성 향상 및 성장 잠재력 제고를 통해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박재곤 외 2007). 하지만 기업의 투자는 투자환경과 인프라가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지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재곤 외 2007). 이러한 불균형적인 투자의 지속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제약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에 대하여 지역 편중, 지방비 부담의 과중 등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술적 접근은 소수(홍진기 2012; 박재곤 2010; 박건영·라공우 2015; 채성주 2012; 김광국 외 2016; 박건우·윤성일 2019)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들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지만, 실제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비수도권 지역의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배분되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국가균형발전적 패러다임의 실질적 기여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이론적 논의로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관련 선행연구에 대해서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모형과 변수를 설정한다. Ⅳ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 및 함의 등을 제시한다.

---

4)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세계 경제 저성장과 국내 산업이 지속해서 침체하는 상황에서 강원경제는 열악한 제조업 환경으로 더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유치 투자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정연, “강원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59억원 확보,” 「이뉴스투데이」, 2020. 9. 14.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4505〉

Ⅱ. 이론적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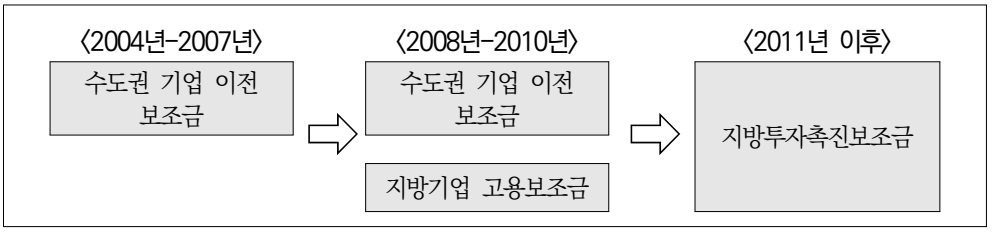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의 개념 및 의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투자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이라 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의 법적 근거는 2004년에 구성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등에 근거하고 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는 과거 수도권 내 기업의 입지를 제한하는 규제방식이 비효율적으로 나타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인센티브의 제공을 통한 유인방식으로 전환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박건우 · 윤성일 2019).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입지하려는 기업에 대한 네거티브(negative) 규제에서 비수도권에 입지하려는 기업에 대한 유인(incentive)으로 규제 패러다임(regulation paradigm)이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경제성장과 고용의 창출을 위해서 수도권 기업의 이전과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제도로 볼 수 있다(홍진기 2012).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는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개편되었다. 먼저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수도권 기업 이전보조금 제도로 운영되었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기존의 수도권 기업 이전보조금 제도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제도로 운영되었다. 2011년 이후부터는 수도권 기업 이전보조금 및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을 결합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개편되었다.

[그림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의 개편 과정



자료: 김광국 외(2016, 31쪽)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는 국고보조금의 형태로 지원되며,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주로 수도권기업의 지방에 대한 이전과 신·증설, 해외기업의 국내복귀 그리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에 있어, 지원 범위는 지역(수도권 인접, 일반, 지원우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보조금 유형(입지 및 설비투자), 그리고 지원비율(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 지역구분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에 대해서 45%~75%로 차등 지원된다. 그리고 본 제도는 중견 및 중소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하는 것이 하나의 주요한 목적이자 특성으로 볼 수 있다(박건우·윤성일 2019).

[표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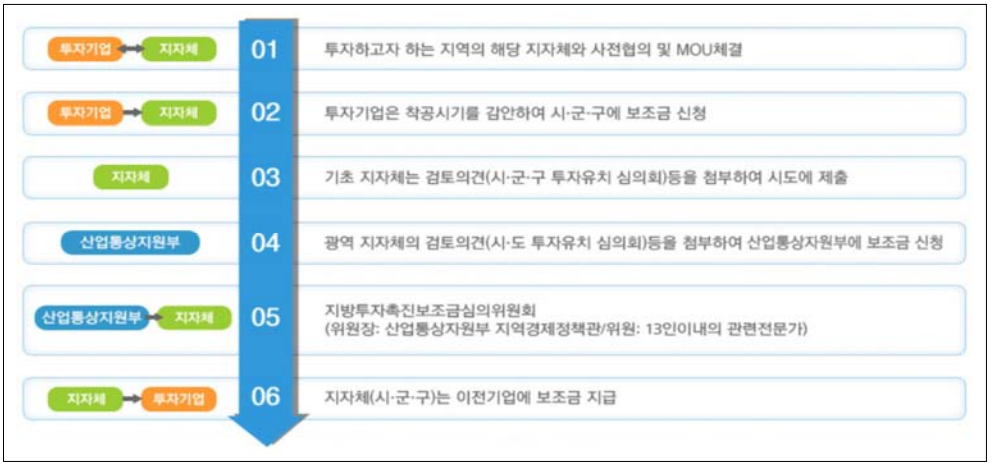
지역구분	보조금 유형	지원비율			매칭비율 (국비 : 지방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인접지역	입지	-	-	토지매입가액의 9%이내	45 : 55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일반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1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65 : 35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지원우대 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2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40%이내	75 : 25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9%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4%이내	
산업위기 대응특별 지역 등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25%이내	토지매입가액의 50%이내	75 : 25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4%이내	설비투자금액의 34%이내	

자료: 박건우·윤성일(2019)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전기업에 지급된다. 첫째,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의 해당 지방지방자치단체와 투자기업은 사전협의와 MOU를 체결한다. 둘째, 투자기업은 착공 시기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신청한다. 셋째,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투자유치심의회의 검토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다. 넷째,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투자유치 심의회의 검토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보조금을 신청한다. 다섯째,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지급을 결정한다. 여섯째,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전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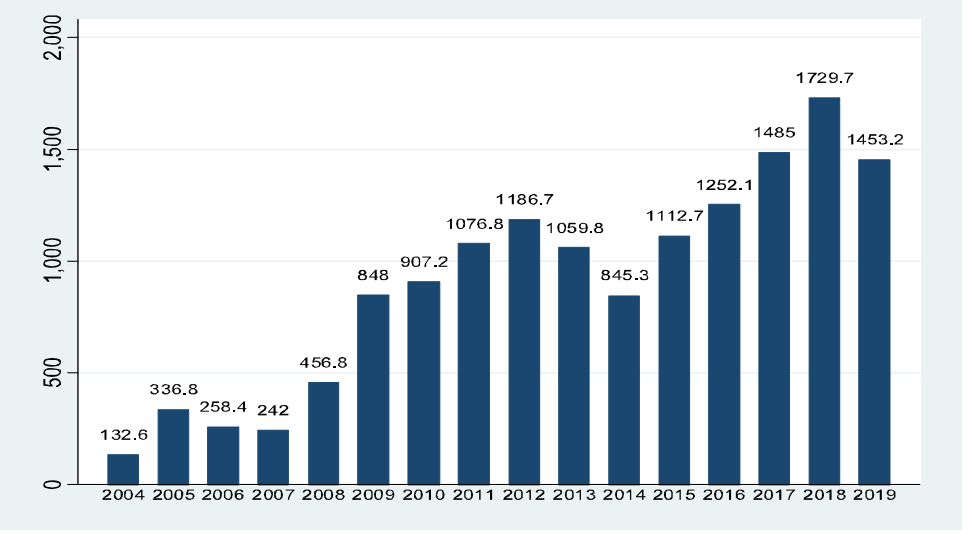
[그림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절차



자료: 지방투자지원시스템(COMIS)

[그림 3]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크게 증가하여 2008년 대비 2012년에는 약 2.6배 증가하였다. 이후 2013년과 2014년에 감소하다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다시 크게 증가하여 2014년 대비 2018년에는 약 2배 증가하였다. 2019년에는 전년 대비 약 16%가 감소하여 1,453억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배분

국가균형발전 혹은 지역발전에 대한 개념은 역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김순은 2018). 물론 정책적 중요성과 그 형태 및 전략에 대해서는 차이가 존재했으나,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일관적으로 중앙정부 중심의 전형적인 하향식(top-down) 발전 전략이 이어졌으며, 이에 따른 지역 간 격차 및 지역문제의 심화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이러한 불균형문제는 지역 내 문제뿐만 아니라, 거시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비용의 증대로 이어져 결국 정부의 비효율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극복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른 지방정부 역할의 증대는 지역의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 실시된 다양한 지역불균형 완화 정책은 여전히 제한적으로 그 효과성이 미미하며 수도권-비수도권과의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한정택 2018). 노무현 정부에서 실시했던 세종시로의 행정 이전은 지역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이지만, 경제 및 사회적 효과성의 측면에서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경쟁력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대도시 중심의 광역구분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지향하였다(기정훈 외 2020). 하지만 이원섭(2013)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지역발전위원회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로서의 역할이 미흡하였고, 실질적인 지역 역량 증진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국정과제에 명시되어 지역발전을 도모하였으나, 지역불균형이 재확대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성경륭 2017). 이처럼 역대 정부에

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주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추진하여 왔으나, 이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는데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3대 전략은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그리고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인재와 지역자산의 활용, 지역 중소도시의 활성화 그리고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산업의 부흥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9대 핵심과제로 구체화하였다. 특히 이전의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중심의 균형발전 패러다임을 가속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를 수행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기존의 지역정책인 중앙정부 중심(top-down)으로의 주도를 극복하고 보다 실질적인 지역자산의 활용을 통해 지역이 주체하도록 촉진하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비수도권의 단일한 규모의 균형 추구를 벗어나, 광역권 및 협력적 도시권의 형태로 보다 다층적인 공간단위의 균형을 모색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를 통해 지역순환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 내부의 자산과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주요 추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시행계획 및 평가와 이와 관련된 심사 및 계획의 추진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특히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국가균형발전의 시각에서 주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2020년 제25회 회의에서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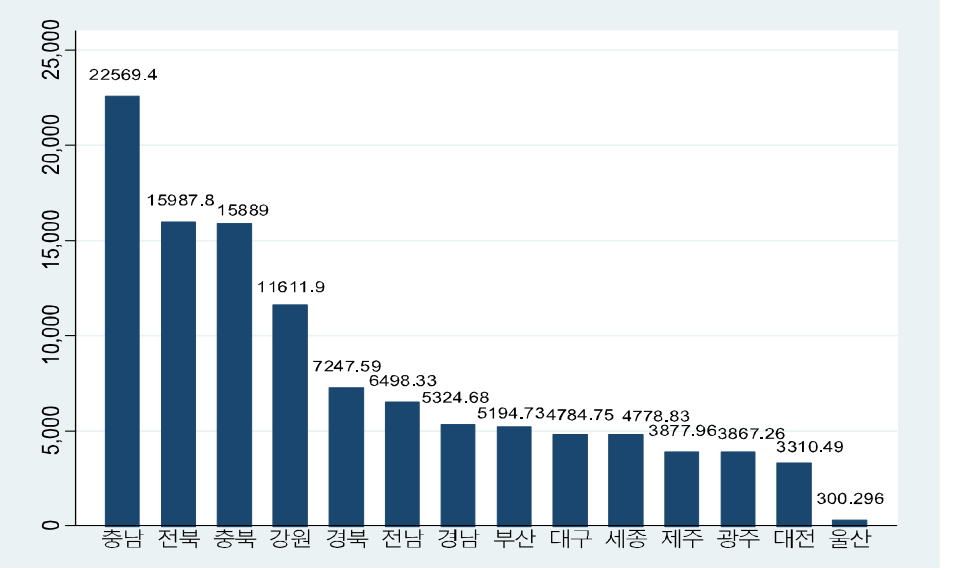
이처럼 역대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세부적인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으나, 지역의 발전과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는 데는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주요하게 논의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별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상대적으로 인접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그리고 강원도 지역에 대한 배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충청남도는 평균적으로 약 22,569백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져 사실상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가장 큰 수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15,987백만원으로 충청남도에 이어 2번째로 배분이 높은 지역이다. 반면 울산 지역은 300백만

원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인 대전광역시의 경우 평균적으로 3,310백만원 수준으로 인접한 충청권 지역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낮은 것으로 집계된다. 수도권과 가장 거리가 있는 제주 지역의 경우는 3,877백만원 수준으로 평균 지원 수준이 광주, 대전, 그리고 울산 지역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 지방투자촉진보조금(평균) 배분 현황(지역별)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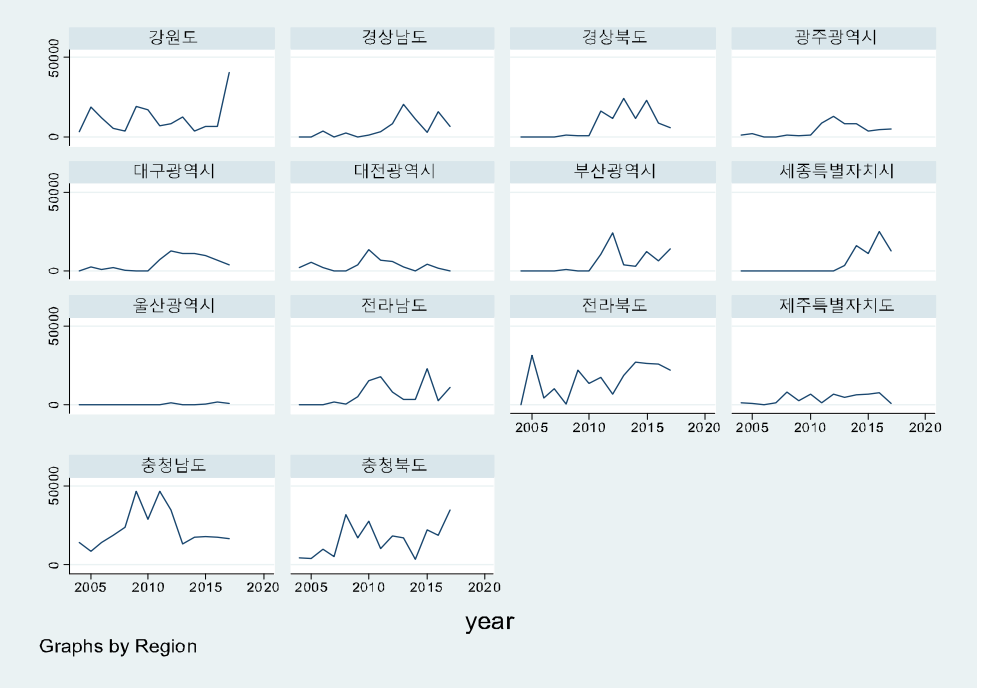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보다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개별 지역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배분의 패턴을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강원도 지역은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 높은데, 증감이 반복되다가 비교적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상도 지역의 경우에는 초기에 배분 규모가 낮았으며, 중기-후기에는 증감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구시의 경우 2010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울산지역은 배분 규모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라도 지역의 경우에는 전라북도가 배분 규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5년 가장 큰 배분이 이루어졌으며, 2015년 이후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면 충청도 지역은 충청남도 지역과 충청북도 지역이 매우 높은 배분 규모로 나타나며, 충청남도는 2010년 전후로 가장 큰 배분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증감이 반복되다가 비교적 최근까지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지역별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배분은 일정하기보다 다양한 패턴을 보임으로써, 그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논의를 구체화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5]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배분 현황(지역별/연도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3. 선행연구 검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 관련 선행연구는 크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투자 보조금제도 일반에 관한 연구(변필성 2010; 박상철 · 문문철 2011; 신두섭 · 이희재 2014)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홍진기 2012; 박재곤 2010; 박건영 · 라공우 2015; 채성주 2012; 김광국 외 2016; 박건우 · 윤성일 2019)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기업투자 보조금 제도 일반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변필성(2010)의 연구에서

는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발전을 추진해 온 기업투자 보조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영국의 기업투자 보조금인 GBI(Grant for Business Investment) 제도를 소개하였다. 박상철 · 문문철(2011)의 연구에서는 투자인센티브 유형과 투자보조금 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영국과 스웨덴,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의 보조금 사례를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의 개편방향을 제안하였다. 신두섭 · 이희재(2014)의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단위에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를 살펴보면 홍진기(2012)의 연구에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추진배경 분석 등을 통해 동 보조금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박재곤(2010)의 연구에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동 제도의 개편방향을 정책목적과 정책수단 간의 정합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박건영 · 라공우(2015)의 연구에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을 강원지역에 초점에 맞춰 제시를 하고, 채성주(2012)의 연구에서는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김광국 외(2016)의 연구에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과정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박건우 · 윤성일(2019)의 연구에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역별 지원 및 유치현황을 분석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투자에 따른 효과, 보조금 배분의 문제, 부정 수급사례 등을 살펴보고, 영국의 지역선별보조금과 유럽연합의 지역결속 기금 사례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 선행연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투자 인센티브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과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지만 실제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최근 박건우 · 윤성일(2019)의 연구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역별 배분 문제를 언급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지역별로 어떠한 요인에 의해 다르게 배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배

분되는지를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국고보조금 배분에 있어서 많은 선행연구에서 국고보조금은 정치적 요인에 따라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Wright 1974; Fiorina & Noll 1978; Weingast & Marshall 1988; Anderson & Tollison 1991; Grossman 1994; Borck & Owings 2003; Volden 2007; 석호원 2016; 강문희 2006; 최호택 2001). 하지만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경우 낙후지역 및 지원우대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일반적인 국고보조금과 달리 경제적 요인이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요인을 통제하고 경제적 요인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Ⅲ. 연구설계

1. 분석모형의 설정

본 연구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배분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종속변수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설정하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내생성(endogeneity)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1기의 변수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배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은 다음과 같다.

$$Subsidy = f(E, P) \quad (1)$$

여기서 $Subsidy$는 종속변수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의미하고, E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경제적 요인을 의미하며, P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정치적 요인을 의미한다. 이처럼 연구모형을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으로 구분한 이유는 기존의 국고보조금 배분의 논리를 활용하였다. 국고보조금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기존의 많은 연구는 주로 정치적 요인을 중심으로 그 논의를 전개하였다(강문희 2006; 김성주 2008; 석호원 2016; 최호택 2001).

이러한 맥락은 국고보조금이 실질적인 지역의 수요보다 정치적인 맥락과 논리로 배분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경우 낙후지역 및 지원우대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와 관련된 요인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따라서 정치적 논리와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자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패널 자료(panel data)를 구축하여 고정효과(fixed effect) 또는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으로 분석을 시행한다.

2. 변수의 설정

가.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역구분과 보조금 유형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금액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인구로 나눈 1인당 규모에 대해서도 변수를 구성하여 활용하였다.

나.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기존의 보조금 결정요인을 통해 논의된 내용을 활용하였다. 보조금의 요인에 대한 분석은 국내외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Svorny & Marcal 2002; Borck & Owings 2003; 전상경 2012; 송준상 2015). 이에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정치적 요인, 그리고 재정적 요인 등 보조금의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한 경제적 변수로는 재정자립도가 분석에 활용되었다(송준상 2015). 그리고 지역내총생산(GRDP),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 고용률, 재정자립도 등의 경제적 요인을 설정하였다. 지역내총생산은 생산측면의 부가가치로서 각 시·도내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는 지역별 거시적 경기변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기존의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어져 왔다(하규만 2001; 엄익천 외 2011).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사업체수를 인구 천명으로 나눈 값으로,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하였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지역내총생산(GRDP),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 고용률은 국가통계포털(KOSIS)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지방재정365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정치적 요인으로는 지방선거 투표율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 지방자치단체장의 진보성향 여부,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정당의 지역장악력 등의 정치적 요인을 설정하였다. 정치적 요인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요인이 분석에 활용되었는데, 이를테면 1인당 국회의원 수, 국회의원의 당선 횟수, 예결위 소속 위원 수, 그리고 여당의

원의 비율 및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송준상 2015)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진보성향 여부는 개인적인 정치적 이념보다 소속 정당을 통해 확인하였다. 아래 [표 5]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활용된 다양한 변수 및 이의 내용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여,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2] 기존 연구의 변수 활용

	변수	조작적 정의
정헌영 (1993)	사회복지 보조금	• (정치) 호남지역, 수도권 지역, 정치적 영향력 등 • (사회경제, 재정) 저소득층 비율, 아동인구비율, 재정자립도 등
최호택 (2001)	국고 보조금	• (정치) 여당 득표율, 지역구분 등 • (사회경제, 재정)1인당소득, 인구/65세이상/도시 인구비율, 자동차수 등
강문희 (2006)	국가의 일반 시 재정지원	• (정치) 의원 숫자, 의원 당선 횟수, 대통령출신지역 • 주요선거시점 등 • (사회경제, 재정)자가용수, 주택보급률, 공무원 수, 1인당 지방세 등
김성주 (2008)	사회복지 보조금	• (사회경제, 재정)재정력지수, 보호대상자수, 인구밀도 등
Borck&Owings (2003)	State 보조금	• (정치) 주지사, 상하원, 공화당 여부, 로비여건 • (사회경제, 재정) 도시규모, 범죄율, 인구, 인구밀도, 소득 등
Svorny& Marcal (2002)	직업훈련 보조금	• (정치) 여당비율, 예결위/상임위소속, 여당 지자체장 수, 의원재임기간, 투표율, 선거 등 • (사회경제, 재정)실업률, 3년이상 실업자수, 국가적 재난 등

주: 보조금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봄
자료: 송준상(2015)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표 3] 변수의 조작화

구분	변수	조작적 정의
종속 변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금액 * 2015년 기준 지역별 물가지수/지역별 인구 수
경제적 요인	지역내총생산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지역 내에서 새로이 창출된 최종생산물 가치의 합
	인구천명당 사업체수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재 사업체수/인구 천명
	고용률	(15-64세 취업자수/15-64세 인구) × 100
	재정자립도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세입 × 100
정치적 요인	지방선거 투표율	(투표자수/선거인수) × 100
	지방자치단체장 득표율	(득표수/투표자수) × 100
	진보성향 지방자치단체장	진보성향=1, 그 외=0
	분점정부	단체장 소속정당의 지역장악력, 동일 정당 지방의회의원 비율

Ⅳ. 분석결과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특정 시점에 대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은 지역도 존재하며, 지원금액의 규모를 2015년 기준 물가지수와 인구규모로 나눈 1인당 변수로 활용해서 살펴보았을 때, 평균적으로 43.7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의 경우에는 지역 및 시기에 따라 19.4%에서 75.6%으로 다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자치단체장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당적에 따라 이를 진보성향으로 구분하고 더미(dummy) 변수화하여 변수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4] 변수의 기술통계

(단위: 백만원, %, 개)

변수	자료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82	.4370703	.5115406	0	2.705204
경제성장률	169	3.514201	2.305229	.1	11.8
ln(지역내총생산)	182	24.49906	.5729776	22.95499	25.46803
고용률	183	59.97814	3.35814	54.2	70.9
인구천명당 사업체 수	174	71.40925	7.316363	48.77	90.07
재정자립도	187	42.65722	16.30862	19.4	75.6
득표율	185	59.48768	10.79329	41.4	85.5
분점정부	185	.7945946	.4050939	0	1
투표율	185	56.30703	6.571365	41.4	68.9
자치단체장	196	.3673469	.4833166	0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배분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하우스만(Hausman) 검정 결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해 확률효과모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모형을 4개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모형을 구분한 이유는 해당 분석에 활용된 경제적 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아, 다중공선성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모형 1에서는 경제적 요인중 경제성장률과 재정자립도만을 포함하였으며, 모형 2에서는 지역내 총생산과 재정자립도를 포함하였으며, 모형 3은 고용률과 재정자립도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모형 4에서는 인구 천명당 사업체 수와 재정자립도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경제적 요인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재정자립도 변수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더 많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경제적 요인을 통제하고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더 많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배분 및 산정방식에 재정자립도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경제적 요인과 관련된 변수(경제성장률, 지역내총생산, 고용률, 인구 천명당 사업체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통제변수로 설정한 정치적 요인 중에서 득표율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10%와 5% 유의수준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정치적 요인 중 투표율의 경우에도, 모든 모형에서 5%와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진보성향 지방자치단체장 변수에 대한 결과는 부(-)의 결과가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보수성향 자치단체장이 있는 지역에 더 많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분점정부에 대한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어떠한 모형에서도 도출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배분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굳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기업을 유치에 힘쓰기 보다 지역주민의 생활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 증대 등 다른 정책에 보다 포커스를 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배분에 있어서 지역 간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배분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 이전의 경우 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해야 하며, 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을 연속으로 3년 이상 영위해야 하며, 기업신·증설의 경우 기업이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기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이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업 이행의 과정에서 많은 기업이 고용미달로 환수 조치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2019년에 정부는 동 제도를 개정하여 환수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5)]

한편 주민의 지방선거 투표율이 높을수록 주민의 정치참여가 높고 이에 부응하기 위

5) 국무조정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실태 점검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9. 12. 18. 〈http://www.opm.go.kr/flexer/view.do?ftype=hwp&attachNo=95760〉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고보조금의 하나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많이 배분받으려고 노력할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진보성향의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렇지 않은 성향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배분에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지역의 경제성장과 발전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보수적 성향의 자치단체장이 진보적 성향의 자치단체장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배분을 유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보수성향의 정치인 혹은 자치단체장이 진보성향의 경우보다 이러한 지역개발에 대한 정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최정열 · 박석희(2014, 104쪽)의 연구에서도, “보수이념의 지방정부는 보수성향의 개발정책을 지지할 것이며, 진보적 이념을 가진 지방정부는 진보적 성향의 복지정책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물론 정치적 이념 스펙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적 성향을 가진 정치인이 적극적으로 성장정책을 지향할 수도 있고, 보수적 성향을 가진 정치인이 분배와 복지정책을 선호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표 5] 실증분석 결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경제성장률	0.00835 (0.0177)			
ln(지역내총생산)		-0.0453 (0.132)		
고용률			0.0231 (0.0243)	
인구천명당 사업체 수				0.00524 (0.0134)
재정자립도	-0.0225*** (0.00548)	-0.0214*** (0.00571)	-0.0212*** (0.00570)	-0.0213*** (0.00577)
득표율	-0.00937** (0.00451)	-0.00838* (0.00470)	-0.00900** (0.00459)	-0.00897* (0.00460)
분점정부=1	-0.108 (0.116)	-0.106 (0.118)	-0.0903 (0.119)	-0.0937 (0.123)
투표율	-0.0310** (0.0121)	-0.0307** (0.0126)	-0.0367*** (0.0141)	-0.0304** (0.0125)
자치단체장 진보=1	-0.191* (0.102)	-0.200* (0.105)	-0.194* (0.105)	-0.192* (0.107)
_cons	3.641*** (0.963)	4.340* (2.409)	2.509* (1.486)	3.205** (1.401)
R^2	0.4078	0.3929	0.3826	0.3853

주: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 〈 0.1, ** p 〈 0.05, *** p 〈 0.01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배분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국고보조금 배분에 있어서 많은 선행연구에서 국고보조금은 정치적 요인에 따라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경우 낙후지역 및 지원우대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요인을 통제하고 경제적 요인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요인 중에서 재정자립도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제변수로 설정한 정치적 요인 중에서 지방선거 투표율과 득표율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보성향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적 측면에서 지역의 경제적 특성과 환경은 상당히 중요하다. 즉 경제적으로 낙후될수록 자연스럽게 인구감소가 수반되고 지역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업의 투자에 따른 고용창출 등의 경제활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지역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투자환경이 열악하고, 매력적이지 않은 비수도권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이러한 맥락에서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을 장려하는 중요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지역의 재정자립이 낮을수록 더 많은 배분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은 보조금의 배분이 경제적 요인과 큰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더 경제적 우선순위를 고려한 보조금의 배분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을 최우선적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기업의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의 적극적 활용이 중요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이전 기업에 대한 협력과 지원뿐만 아니라 관리를 수반해야 한다. 그 이유는 기존의 연구(박건우 · 윤성일 2019)에서도 밝혀진 것처럼 해당 보조금을 부정으

로 수급하거나 형식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즉 보조금 부담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다양한 문제점의 해결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으로 보조금 배분이 이루어진다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배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실증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초기 연구로써 후속 연구의 논의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배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본 연구에서 미처 포함하지 않은 변수로 인해 회귀계수의 편의(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바탕으로 좀 더 정교한 가설과 방법론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강문희, “지방재정지원금 배분의 결정요인: 이론모형 및 실증연구에 관한 비판적 고찰,”「지방정부연구」vol.10 no.4, 한국지방정부학회, 2007, 7~39쪽.

기정훈 외,「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협력사업 추진전략」, (사)한국지역개발학회, 2019.

김광국 · 백승기 · 황지욱, “지역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방투자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한국지역개발학회지」vol.28 no.1, 한국지역개발학회, 2016, 29~43쪽.

김성주, “국고보조금의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에 대한 영향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박건영 · 라공우, “강원지역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통상정보연구」vol.17 no.1, 한국통상정보학회, 2015, 115~134쪽.

박건우 · 윤성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지방자치학회보」vol.31 no.1, 한국지방자치학회, 2019, 27~49쪽.

박상철 · 문문철, “지방산업 및 투자의 문제점과 활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11, 1382~1399쪽.

박재곤, “지역투자보조금의 개편방향과 세부 정책과제,”「KIET 산업경제」146호, 산업연구원, 2010, 39~50쪽.

박재곤 · 허문구 · 변창욱,「지방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산업연구원, 2007.

변필성, “영국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제도의 지역 정책적 시사점,”「국토연구」347호, 국토연구원, 2010, 90~101쪽.

석호원, “국고보조금 배분의 정치적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한국행정학보」vol.50 no.2, 한국행정학회, 2016, 71~96쪽.

송준상, “국고보조금 배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정치적 요인을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신두섭 · 이희재,「지방자치단체의 기업투자 유치와 지방재정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엄익천 외,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한국정책학회보」vol.20 no.4, 한국정책학회, 2011, 105~134쪽.

윤태섭, “지방보조금 규모 관련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정책분석평가학회보」vol.27 no.2.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7, 49~74쪽.

정헌영, “국고보조금 배분의 결정요인 연구,”「서경대학교 논문집」21호, 서경대학교, 1993, 187~199쪽.

채성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충북 FOCUS」57호, 충북연구원,

2012, 1~28쪽.

최정열 · 박석희, “지방정부의 정치적 이념과 정책선호: 개발정책과 복지정책에 대한 영향 비교,” 「지방행정연구」 vol.28 no.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99~125쪽.

최호택, “한국에서의 총선 결과가 국고 보조금 배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국제지역연구」 vol.5 no.2, 국제지역학회, 2001, 171~200쪽.

하규만, “국민총생산과 연구개발 투자비율에 관한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1990년대 초반부터,” 「행정논총」 vol.39 no.1, 서울대학교, 2001, 203~221쪽.

홍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의 추진현황과 정책과제,” 「KIET 산업경제」 168호, 산업연구원, 2012, 52~60쪽.

Anderson, G. M. and Tollison, R. D., “Congressional influence and patterns of New Deal spending, 1933-1939,” *The Journal of Law & Economics*, vol.34 no.1, 1991, pp.161-175.

Borck, R. and Owings, S.,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governmental grants,”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vol.33 no.2, 2003, pp.139-156.

Fiorina, M. P. and Noll, R. G., “Voters, legislators and bureaucracy: Institutional design in the public sector,”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68 no.2, 1978, pp.256-260.

Grossman, P. J., “A political theory of intergovernmental grants,” *Public Choice*, vol.78 no.3-4, 1994, pp.295-303.

Svorny, S. and Marcal, L., “The Allocation of Federal Funds to Promote Bureaucratic Objectives: An Empirical Test,” *Contemporary Economic Policy*, vol.20 no.3, 2002, pp.209-220.

Volden, C., “Intergovernmental grants: A formal model of interrelated national and subnational political decisions,” *The Journal of Federalism*, vol.37 no.2, 2007, pp.209-243.

Weingast, B. R. and Marshall, W. J., “The industrial organization of Congress; or, why legislatures, like firms, are not organized as markets,”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88, pp.132-163.

Wright, G., “The political economy of New Deal spending: An econometric analysi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974, pp.30-38.

A Study of Empirical Analysis on Allocation of Local Investment Promotion Subsidy: Implications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ark Geon-woo* Yoon Sung-i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allocation on local investment promotion subsidies. There are very few studies on the promotion of local investment, though it is an essential policy tool i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cademic works mainly focus on discussing its current challenges; however, this subsidy's logic is still un-explored. To overcome existing academic limitations, this study analyzed the determinants for which local investment promotion subsidies were distributed among 14 regional local governments excluding metropolitan areas such as Seoul, Incheon, and Gyeonggi from 2004 to 2017. In this study,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are considered as significant factors on local investment promotion subsid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fiscal independence had a negative (-) effect on local investment promotion subsidies among economic factors. In contrast, the local election turnout has a negative (-) effect on the local investment promotion subsidy among the political factors set as a control variable. Non-progressive mayor or governor have more interest in attracting this subsidy, which is found to have a negative (-) effect on the investment promotion subsidy. From result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improves understanding of these subsidies' allocation logic and provides implications for effective allocation of subsidies in the future.

□ Keywords: Local Investment Promotion, Balanced Development, Regional Economy

---

* First Author, Visiting Scholar, Better Regulation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